

['생태계 보물섬, 제주' 그 百年의 기록<11>]1920년대 한라산 대 규모 조림 시작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입력 : 2004. 04.28. 00:00:00



제1부 제주식물 세계화 100년

10. 제주조림사

한라산과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조림이 시작된 것은 1920년대다. 한라산 조림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와 때를 같이한다. 일제는 1914년 제주지역 임야 조사에 착수, 1921년 소유별 경계를 확정된 이후 이듬해부터 본격 조림사업에 뛰어 들었다.

이같은 사실은 전라남도 제주도청(濟州島廳)이 1924년에 펴낸 '未開의 보고, 濟州島'에서도 확인된다. 이 보고서에는 1921년 제주도에 산림과 출장소를 신설하고 임업기술원을 배치, 국유림 경영과 벌채 및 조림을 구체화했다.

한라산 조림은 그 이듬해인 1922년부터 본격 시작된다. 일제의 조림사업은 당초 50년간에 걸쳐 1만ha(3천만평) 계획으로 착수됐으며 패망 직전까지 20여년간 계속됐다.

일제가 20세기초 한라산을 비롯한 제주지역 조림에 공을 들인 것은 제주의 부원(富源) 때문이었다. 제주를 일본국의 부속섬쯤으로 여겼던 일제는 한라산의 산림자원에 눈독을 들였다. 그들의 표현대로 '미개의 대보고'인 한라산 산림자원 개척을 목적으로 벌채와 대대적인 조림에 나선다.

일제의 조림정책과 관련 제주도지(濟州道誌, 1982)는 '일제는 수탈임정(收奪林政)이 임상(林相)의 급속한 황폐화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여 육묘와 조림도 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조림은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됐다.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문건이 최근 본보에 의해 드러났다. 취재진은 20세기초 한라산의 조림사를 추적하던 중 일제때 조림관련 문서를 확인했다.

이 조림대장은 일제가 조림사업에 착수한 첫 해인 1922년부터 작성된 것으로 제주읍 아라리를 시작으로 제주 전역의 국유림을 대상으로 조림한 내역을 담고 있다. 산림 구역인 임반(林

班)·소반(小班)과 행정구역별 위치, 수종, 면적, 비용은 물론 활착률까지 자세하게 정리돼 있다.

조림대장에 기록된 것만 살펴보더라도 첫째 10ha(3만평)를 시작으로 광복되던 해인 1945년 까지 계속돼 20여년간 모두 5천78ha(1천5백20여만평)에 이르고 있다.

제주대 김문홍 교수는 “이 때가 한라산 국유림을 대상으로 경제적 목적과 식민지 개발을 위한 조림의 시초”라고 말했다.

조림은 곰솔과 상수리나무에 집중됐다. 초기 곰솔(해송, 흑송)과 적송을 비롯해 편백, 삼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비자나무, 잣나무, 황벽나무를 비롯해 한대 침엽수종인 이깔나무도 포함돼 있다. 표고자목을 확보할 목적으로 상수리나무를 집중 조림한 것이 눈길을 끈다. 당시 삼나무와 편백은 시험조림의 성격이 짙었다.

난대산림연구소 강영제 연구사는 “이번에 확인된 일제의 조림문서는 한라산 시험조림과 적지 선정, 산림자원 개발 역사를 추적해 볼 수 있는 결정적 자료”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때 조림한 나무들은 무분별한 벌채와 4.3때 대부분 소실돼 현재 남원을 한남리와 동홍동 등 지역에 일부 남아있을 뿐이다.

학계에서는 한라산 조림이 사실상 처음 시작된 20세기의 조림사를 종합 정리해 당시 조림지역과 수종을 추적·조사해 사료화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 광복후 조림사-1973년 전국토 ‘치산녹화’ 착수

광복 이후에도 조림은 해마다 대대적으로 계속되었다. 주 수종은 삼나무와 곰솔이었다. 편백은 1960년대까지 국유림에 소규모로 심어졌으나 1969년부터는 주 조림수종이 되었다.

광복후 우리나라의 조림정책은 1973년 이른바 전국토를 대상으로 진행된 ‘치산녹화사업’을 계기로 전환기를 맞는다. 이후 현재까지 네차례에 걸쳐 수정·보완됐다. 제주지역도 정부 산림정책의 기초아래 변화과정을 겪어왔다.

1973년부터 1987년까지 15년간은 ‘치산녹화’기였다. 이 시기는 1, 2차에 걸쳐 조기에 녹화하는 정책이 주도하던 때였다. 수종도 삼나무와 편백 등 상록침엽수에 집중됐다. 반면 숲가꾸기 사업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 기간 조림면적은 3만7천여ha. 이 가운데 삼나무가 2만8천여ha로 90%를 차지했다. 편백과 해송이 뒤를 이었다.

녹화위주의 조림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조림정책이 ‘산을 푸르게’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자원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1988년부터 10년간 3차 조림기는 삼나무와 편백, 해송과 더불어 상수리나무의 조림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바뀌었다. 이때부터는 삼나무 조림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대신에 상수리나무와 느티나무 등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높은 활엽수 위주로 조림이 전환됐다. 그러나 조림면적은 크게 줄었다. 숲가꾸기와 산림휴양시설, 환경조림이 두드러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치산녹화 정책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30년간 시행된 조림면적은 4만 1ha천여ha에 이르고 있다.

최근 정부는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기능별 숲가꾸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가꾸어야 한다는 취지다.

제주지역도 숲가꾸기가 과제다. 중산간과 오름에 심은 삼나무, 편백은 제대로만 가꾼다면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수령이 30~40년생에 불과하지만 벌기령인 60~70년생이 될 경우 우량목재로 성장할 것이다. 또한 경제, 환경, 공익 등 복합기능을 갖춘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기대된다. 관건은 가지치기와 간벌 등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어떻게 가꾸고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 다른 지방에선/금산군-인삼의 고장...약용수로 조림

조림도 차별화되고 있다. 인삼의 고장 충청남도 금산군이 올해부터 조림정책을 약용수로 전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금산군은 인삼약초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살리고 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해 금산만의 차별화 된 조림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각 마을의 특색과 어울리는 약용수 조림사업에 착수했다. 경제수 조림 단계에서 벗어나 약용수, 특수 경제수 중심으로 변화시켜 금산만의 건강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시도다.

잣나무, 상수리, 느티나무 등 그 동안의 용재림 및 경제수 조림에서 탈피 산딸나무, 산수유, 조팝, 배롱나무, 살구나무, 삼나무 등 특용수로 눈을 돌린 것이다.

이러한 조림정책의 변화는 금산군의 역점사업인 1천개의 자연공원가꾸기와 연계되면서 더욱 충실해져 총 3백80ha에 1백만본의 특용 경제수가 공원별로 식재되는 등 특색있는 산림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같은 결과에 힘입어 금산군은 생활주변 약용수 식재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사진설명]일제가 1930년대 한라산에 심은 삼나무 조림지. 수령이 70년이 넘는 것으로 관리당국인 난대산림연구소는 연구와 휴양림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사진=강경민기자 gmkang@hallailbo.co.kr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